

"낭만의 보성 녹차밭으로 오세요"

17일 밤 '2016 보성 차밭 이순신 빛축제'가 열리고 있는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다향각 주변 녹차재배단지가 녹차 밭을 수놓은 수만 개의 전구로 오색 물결을 이루고 있다. 축제는 내년 1월24일까지 열린다. /김진수기자 jeans@kwangju.co.kr

징용 피해자 52명 중 1명밖에 못찾았는데…

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광주·전남 피해 첫 조사 결과 보니

한국전쟁 거치며 자료 유실…조사위 활동 이달말 종료 최종 확인 40명중 1명 순천 출신…동생 피신후 연락 두절

일제강점기 동생과 함께 일본에 있었던 순천 출신인 이모(1882년생)씨는 1923년 9월1일 관동(간토·關東)대지진을 현장에 서 목격했다. 지진 다음날 조선 사람들에 대한 학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 은 이씨는 동생과 함께 피신을 준비했다. 그는 그 과정에서 동생을 먼저 차에 태워 보냈다. 하지만 정작 본인은 차에 타지 못 했고,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겼다.

보성에 거주하고 있는 이씨의 손자(67) 는 "작은 할아버지(이씨의 동생)가 생전 에 늘 '나 때문에 형이 죽고 나만 살아남았 다'라는 말씀을 하셨다"며 "결혼 후 매년 음력 7월7일이면 할아버지 제사를 모셨는 데, 작은할아버지를 통해 할아버지의 소 식이 끊긴 날짜를 안 뒤부터는 소식이 끊 긴 관동대지진(음력 7월21일) 이튿날(음 력 7월22일)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"고 말

정부가 일제강점기 관동대지진 당시 조 선인에 대한 집단 학살 사건 피해자 40명 을 공식 확인했다. 전남지역에서는 순천 출신의 이씨가 관동대지진 학살 사건 피 해자에 포함됐다.

하지만 피해 추정자로 명단에 올라 있 던 광주·전남지역 희생자 52명에 대한 확 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진 행해온 위원회의 활동이 올해 말에 종료 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.

국무총리 소속 '대일항쟁기 강제동원

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 원위원회'는 17일 "지난해 3월부터 최근 까지 '일본 진재(震災)시 피살자 명부'를 조사·분석한 결과 명부에 수록된 286명 중 28명이 관동대학살 피해자로 확인됐 다"고 밝혔다.

위원회는 또 '3·1운동 피살자 명부'에 수록된 2명과 순천 출신 이씨를 포함해 명 부에 없는 다른 10명도 본적지 조사 등을 통해 관동대학살 피해자로 최종 확인했

'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'와 '3·1운동 피살자 명부'는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3 년 피해신고를 모아 만들었으나 한때 유 실됐다가 2013년 6월 주일 한국대사관을 이전 신축할 때 다시 발견됐다.

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의 이름 과 주소, 피살 당시 상황을 담은 '일본 진 재시 피살자 명부'에 수록된 광주·전남지 역 희생자는 모두 52명이다. 지역별로는 영암이 16명으로 가장 많고, 무안 14명, 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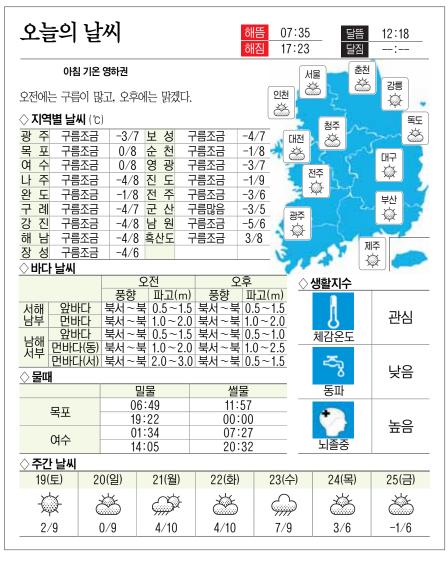
주(순천) 8명, 나주 4명, 영광 3명, 장흥 2 명, 강진·광산·고흥·담양·함평 1명씩이 다. 이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돼 일하던 중 대학살 때 희생됐다.

이들에 대한 세부 확인 조사는 아직 진 행되지 않은 상황이다. 위원회는 그동안 명부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제적등본 조회 를 통해 명부 검증 작업을 진행했지만 207 건이 미회신·확인불가로 조사돼 검증에 어려움을 겪었다.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상당수가 멸실됐기 때문이다.

하지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되면서 관련 업무를 이관할 부처가 없어 이 지역 희생자 52명을 비롯한 남은 피해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쉽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.

위원회 관계자는 "이번 결과는 한일 정 부간 최초이지만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아 계속 조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"이라고 밝혔다.

/김경인기자 kki@kwangju.co.kr



'광주-대구 고속도로' 통행료 2배 인상

도로公 "50% 할인 없애"

왕복 4차로 확장 개통(22일)을 눈 앞 에 둔 88올림픽 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이달 안으로 2배가량 오를 전망이다.

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88 올림픽 고속도로 확장 개통 이후 고속도 로 통행료 인상을 계획 중이다.

광주-대구간 고속도로 담양~성산 (152km) 구간 승용차의 경우 기존 3900원 에서 8000원 안팎으로 통행료가 오르게 된다. 도로공사 측은 이번 통행료 인상에 대해 88올림픽 고속도로가 2차선으로 운 영됐던 과거와 달리 4차로로 확장 개통

되면서 그간 50% 할인 적용됐던 통행료 가 복구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.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최근 밝힌 고속도로 통행 료 4.7% 인상분까지 보태게 될 경우 인 상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. 인상 시기는 29일로 논의되고 있으며, 인상 폭은 차종 과 관계없이 기존 요금에 50% 정도로 예 상된다고 도로공사 측은 밝혔다.

도로공사 관계자는 "고속도로가 4차 로로 확장 개통되면서 이전까지 50% 할 인 적용됐던 통행료가 정상 복구되는 개 념으로, 오는 28일쯤 정확한 인상폭이 확정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/김형호기자 khh@kwangju.co.kr

시·도 교육감협 "누리 예산 해결하자" 정부·국회에 회의 제안

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(광주 시교육감)이 누리과정(만3~5세 무상보 육)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대표와 교육부 장관,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제안했다.

장 회장은 17일 "정부와 국회는 누리과 정 문제로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책임을 지고 누리 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

련해야 한다"며 "오는 21일 여야 대표와 시·도교육감협의회장, 교육부 장관, 기획 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누리과정 예 산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자"고

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"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관련 예산과 대 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될 보육 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

고,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"고 촉구했다.

협의회는 이어 "누리과정 예산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 또는 반토막 나 당장 내년 초 보육 대란은 불가피한 상황' 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.

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했다. 반면 어 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대구(6개월) ·울

산(9개월)·경북(6개월)이 일부 편성하고, 나머지 교육청은 편성하지 않았다.

그러나 광주·전남·서울·경기 등 4곳의 경우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의회가 전액 삭감했다.

이에 따라 내년 초 어린이집뿐만 아니 라 유치원까지 만 3~5세 보육대란이 불 가피하게 됐다.

/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'대통령 명예훼손' 日 산케이 서울지국장 1심 무죄

소된 일본 산케이(產經)신문 가토 다쓰 야(加藤達也·49) 전 서울지국장이 1심 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(이동근 부장판사)는 17일 "피고인의 기사는 부 적절한 점이 있지만,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 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"며 무죄를 선고했다.

재판부는 기사에 박 대통령과 함께 있

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 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된 정윤회 로 기사가 다룬 박 대통령 관련 소문이 허위임은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. 또 이 에 따라 기사 내용이 박 대통령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박 대통령 개인의 명 예를 훼손한 것은 맞다고 봤다.

> 그러나 기사 내용이 세월호 참사라는 한국의 국가적인 중대 사안과 관련한 대 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공인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 니라고 판단했다.

